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1996. 4.

安 仁 海 (北韓硏究室 責任硏究員)
李 憲 京 (北韓硏究室 責任硏究員)

民族統一硏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硏究院의 硏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硏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硏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硏究院 北韓硏究室

目 次

Ⅰ. 問題提起 1

Ⅱ. 北韓의 對美·中政策 目標 2

1. 對美政策 目標

2. 對中政策 目標

Ⅲ.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 7

1. 對美 懸案

2. 對中 懸案

Ⅳ. 北韓의 對美·中政策 展望 16

1. 對美政策 展望

2. 對中政策 展望

3. 綜合展望

Ⅴ. 韓國의 考慮事項 25

Ⅰ. 問題提起

○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 유지는 물론 사회주의체제 유지까지 도전을 받고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체제 안보를 위해 對美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최대 당면과제로 삼는 한편, 중국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 복원을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한·미의 「4자회담」 제의(4.16)를 둘러싼 북한의 대응태도는 향후 북한의 對美·中政策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대미·중정책의 목표와 현안을 분석하고, 북한의 정책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Ⅱ. 北韓의 對美·中政策 目標

1. 對美政策 目標

가. 정치·군사적 목표

○ 북한은 전통적으로 국제혁명역량강화 전략으로 反美主義를 채택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해 남한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1]을 주장하여 왔음.

- 최근 북한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주장[2]과 함께 단계적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3] 기존의 북·미간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목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과 관련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1974.3.25),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간 불가침선언(1984.1.10), 북·미간 평화협정체결(1994.4.28), 평화협정체결 중간단계로서 대미 잠정협정체결(1996.2.22) 등을 주장하여 왔음.

2) 북한은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를 거론한 이후 손성필 러시아주재대사의 발언(1991.3.), 윤기복 당비서 발언(1991.5.3), 한시해 「조평통」 부위원장 발언(1991.6.2) 등을 통해 연방제 수정의사를 표명하였음.

3) 북한은 1988년에 제안(11.7)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였음. 아울러 이종혁 당부부장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PKO)으로의 전환을 시사하였음(4.29).

○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미 정치·군사적 당면목표는 남한배제를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대미 직접평화협정 체결임.

나. 경제적 목표

○ 북한은 주체경제의 실패 및 1995년 대홍수로 인한 심각한 식량문제를 서방세계의 정부 및 비정부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서방정부의 대북 지원 부족으로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1995년 이래 서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세계식량계획(WFP) 등 민간단체 및 유엔기구 등 비정부 차원의 식량 및 현금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구조적 요인으로 야기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그러나 북한은 개방정책 부진 및 식량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획득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음.

- 1996년 4월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방미발언(4.22)을 통해 경제침체 원인을 외국의 경제제재 탓으로 돌렸음.[4)]

---

4) Kim Jong U,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Policy* (paper

○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미 경제목표는 심각한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인 경제난 해결을 위해 서방세계의 대북 지원과 서방기업의 經濟特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획득에 있음.

2. 對中政策 目標

가. 정치·군사적 목표

○ 북한은 毛澤東 생존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세습체제 인정을 주요 대중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왔음.

-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지원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 온 반면, 중국은 毛澤東 생존시부터 사회주의적 일체감, 한국전 참전 지도부의 대북 유대감, 소련과 미·일 견제세력으로서의 가치 등으로 인해 북한을 중요시해 왔음.

○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채택된 중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

---

presented at the Sigur Center Seminar in April 22, 1996), p. 7.

외고립 방지를 위해 중국과의 전통적 혈맹관계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5)]

- 북한은 중국의 對대만 무력시위(3.8~22)로 인한 중·대만간 긴장고조시 중국의 覇權主義를 비난하지 않고 중립을 지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음.

○ 한편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핵심 군사기술을 도입하는 등 북·중 군사관계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34주년(1995.7.11)을 맞아 중국과의 친선발전과 협력증진을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중 정치·군사적 목표는 전통적 북·중 혈맹관계 복원을 통한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 승인획득과 군사적 유대관계 지속을 통한 체제안보 유지에 있음.

---

5) 최근 중국 공산당중앙위 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 姜春雲은 전통적인 중·북간 '脣齒關係'를 재강조하고 중국은 국제정세가 변화해도 양국간의 친선협력 증진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음. 「조선중앙방송」, 1996.4.16.

나. 경제적 목표

ㅇ 북한은 중공업 및 군사 우선주의로 야기된 농업·경공업 분야의 침체를 중국원조를 통해 극복하려 노력해 왔음.

- 북한은 1953년 전후복구 사업기부터 청산결제 및 우호가격에 의한 상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무상으로 원조받고 있음.[6)]

ㅇ 이로 인해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진 對中 경제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은 經濟外交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김복신 정무원 부총리의 「경제·무역 공동위」 개최를 위한 방중(1995.1.26~28),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1995.4.8) 등 대중 경제협력 모색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따라서 북한의 대중 경제목표는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획득을 위해 중국과의 전통적 선린경제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음.

---

6) 자세한 내용은 Natalia Bazhanova, *Between Dead Dogmas and Practical Requiremen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North Korea, 1945~1990,* 梁浚容 譯, 「기로에 선 北韓經濟: 對外經協을 통해 본 實相」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92), pp. 233~243 참조. 현재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 및 무상원조 감소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35%를 넘고 있음.

Ⅲ.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

1. 對美 懸案

가. 대미 직접평화협정 체결과 「4자회담」 수용여부

○ 북한은 대미 직접평화협정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 방안이라고 주장하여 왔던 바, 停戰體制 무력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정전위 북측요원을 철수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음.

- 북한은 1993년 4월 체코대표단, 1994년 12월 중국대표단, 1995년 2월 폴란드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켰고, 1995년 5월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음.

○ 또한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DMZ무효화를 선언(4.4)하는 한편, 판문점에서 무력시위(4.5~7)를 벌였음.

○ 이에 대해 한·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4.16)하였으나, 북한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에서 북·미 직접대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중앙방송」과의 회견(4.18), 방미중인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반응(4.21), 베를린 북·미 미사일회담(4.21~22) 반응, 손성필 러시아주재대사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4.25), 이종혁 당부부장 방미발언(4.26) 등을 통해 '검토중'임을 시사하였음.

○ 북한은 이같이 「4자회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실리 추구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음.

- 북한은 「4자회담」 제의 당사자를 미국으로 한정함으로써 남한배제전략을 고수하는 한편, 미국의 진의파악을 위해 각종 창구를 동원 미국과 접촉중임.[7]

○ 북한이 「4자회담」 수용없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4자회담」 문제는 북·미간 관계개선 과정에서 중요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7) 북한은 대미 경제관계개선을 위해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워싱턴(4.22~26)에, 이종혁 당부부장을 뉴욕(4.24~)에 파견하였음. 한편 북한은 「4자회담」 제의 배경에 대한 미국측 입장 청취를 위해 한성렬 UN주재공사가 미국의 리차드 크리스텐슨 한국과 부과장과 비밀접촉하였고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를 접견(4.26)하였음.

나. 경제제재완화 획득

ㅇ 미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고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취해 왔으나, 북·미 핵합의 이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대북 '연착륙'(soft landing)정책[8]을 채택하고 있음.

- 연착륙정책 일환으로 미국은 1995년 부분적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1.9)한 데 이어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 및 자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해 대북 식량 및 현금을 지원하였음.[9]
- 美 상무부는 1996년에도 민간 차원의 대북 구호지원 증대를 위한 규제 해제(4.7)를 통해 구호용 식량, 보건 및 의약품류, 의류 및 가정 필수품 등 인도적 차원의 물품에 한해 지원토록 하였음.

ㅇ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이행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북한을 여행경고국(travel warnings) 명단에서 제외

---

8)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보는 종합적 평가는 북한은 현재 餓死 직전의 상태로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정치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경우 내부적 불안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9) 1995년에 美 적십자사가 7,000달러, 美 카톨릭이 5,000달러를 지원하였고, 美 정부는 1995.7, 8월 두 차례에 걸쳐 22만 5,000달러를, 그리고 유엔프로그램을 통해 2백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2.24)시켰음.

- 아울러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량국가' 명단에서 제외(1996.3)시켰음.[10]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신속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대북 경제제재 완화문제는 향후 북·미간 중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임.

다. 미군유해송환

○ 북한은 대미 협상창구개설 및 외화획득을 위해 「북·미간 미군유해 문제에 관한 합의서」(1993.8)에 의거, 5회(1993.7.12; 11.30; 12.7; 12.14; 12.21)에 걸쳐 총 162구의 미군유해를 송환하였음.

○ 이후 1996년 1월 하와이에서 미군유해송환협상이 재개(1.12~14)되었으나 유해송환 보상 등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결렬(1.14)되었고 미군유해발굴팀도 해산(1.19)되었음.

---

10)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무력을 통한 위기국면 탈피 가능성을 감안, 이란·이라크 등과 함께 테러국가로부터는 제외시키지 않고 있음(4.30).

- 북·미간 미군유해협상의 중요쟁점은 旣송환 미군유해 보상문제, 북·미 공동조사단에 의한 추가 유해발굴문제, 생존미군포로 송환문제 등이었는 바, 북한의 공동조사 거부 및 과다한 보상금 청구[11]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었음.

○ 그러나 미군유해송환은 11월 미대통령 선거시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금년 5월 뉴욕에서 재개될 2차회담시 1차회담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북·미간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임.

라. 미사일수출 지속여부

○ 북한은 외화획득 및 대중동외교 강화를 위해 이란·이라크·시리아·이집트 등에 미사일을 수출하였는 바,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미사일 수출통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였음.

○ 미국의 요청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제조 및 對중동 수출문

11) 북한은 미군실종자수색 비용으로 350만 달러를 요구(번스 美 국무부 대변인 주장; 1995.11.3)하였음.

제를 의제로 베를린에서 개최된 북·미간 미사일회담(4.21~22)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차기회의 개최만 확인하고 종결되었음.

- 북·미간 베를린 미사일회담 쟁점사항은 북한의 300km 이상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문제, 미사일 수출 및 생산 중지문제, 미사일탑재 가능 생화학무기 생산 및 수출 중지문제 등 미국측 주장과 북한측의 '先 북·미 평화협정체결, 後 미사일 수출회담' 주장 및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 등이었음.

○ 따라서 미사일회담은 북한의 대미 군사창구 확보 요구 및 경제적 필요, 미국의 강한 미사일 수출 중지의지로 인해 금명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북·미간 갈등표출이 예상됨.

2. 對中 懸案

가. 「4자회담」

○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고려할 때 「4자회담」 당사국으로 지

정된 중국의 북한입장 지지여부는 북한의 대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북한지지 일변도로부터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로 변하였고,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음.[12]

○ 「4자회담」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자세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북한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임.

○ 따라서 향후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중국의 회담참여문제와 관련 북·중간에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12)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헤이그에서 개최된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4자회담」과 관련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밝혔음(4.20).

나. 군사지원 획득

○ 북한은 중국과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 중국의 군사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입장임.

-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전투기 비행에 필요한 석유 등 전략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해외 무기수출 중단요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도 대북 군사지원 자제 요청을 받고 있는 바,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

- 또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바, 북한에 대한 석유 등 전략물자 공급을 감축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향후 북·미관계 개선 이후 한·중간 안보협력 논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군사동맹조약의 성격도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북·중간 군사·안보관계와 관련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다. 지속적인 경제지원 확보

○ 북한은 1992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화결제를 요구받아 왔는 바, 이는 북한의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하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막대한 경제손실을 당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였음.

- 중국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20~30만 톤을 비공식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북한은 중국의 동북3성(吉林, 遼寧, 黑龍江)과의 변경무역을 통해 식량 및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화결제를 통한 교역을 요구받고 있는 바, 향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지속 문제는 북·중간 관계복원에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됨.

Ⅳ. 北韓의 對美·中政策 展望

1. 對美政策 展望

가. 평화협정체결 문제와 미사일·유해송환 회담

○ 북한은 대미 직접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DMZ무력화 지속, 미사일·유해송환회담 지속 등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대미 핵협상과정에서 NPT탈퇴선언(1993.3.12), IAEA탈퇴(1994.6.13) 등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미기본합의서」(1994.10.21)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인정 및 KEDO에 의한 경수로 지원 등을 획득하였음.
- 따라서 향후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여부에 따라 DMZ나 해상에서의 무력시위, UN사령부 해체주장, 무력충돌 등을 통해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북 온건정책 유도를 통한 경제이익 극대화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11월 재선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나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 등을 크게 쟁점화하지 않고 성실히 임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북한은 兩會談을 통해 '先 평화협정 체결, 後 미사

일수출중지 및 유해송환'이라는 기본입장은 견지할 것으로 보임.

나. 「4자회담」

○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토대확보를 위해 「4자회담」에 대해 거부·수용·수정제의·수용지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거부: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배제한 채 대미 직접 평화협정만이 유일한 한반도 평화보장방안으로 주장하여 왔는 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거부할 수 있음.
- 수용: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약화된 안보 및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수적인 바,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수용할 수도 있음.
- 수정제의: 북한은 「4자회담」을 회석시키기 위해 「3자회담」(남한·북한·미국) 내지는 '변형된' 「4자회담」을 제의할 수도 있음.
- 수용지연: 북한은 북·미간 및 남·북간 접촉에서 최대의 양보를 획득하기 위한 전술로 「4자회담」 수용문제 자체를 카드화하여 '시간끌기'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음.

○ 어떤 경우든 북한은 한·미의 「4자회담」 제의의도와 이해득

실을 신중히 고려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수용지연 후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4자회담」 수용문제와 관련 'KEDO식 실리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 수용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북한은 '북·미간 실무회의' 내지는 '의제선택을 위한 4국실무대표자회의'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남한을 옵저버'로 한 「4자회담」 제의 가능성도 있음.

○ 물론 북한이 전통적인 남한배제 논리를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거부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연방제 수정, UN가입(1991.9)을 통한 '하나의 조선' 논리 포기, 反美主義 수정 등 수많은 정책전환을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4자회담」 수용가능성이 높음.

- 특히 북한은 김정일 최고지위 승계를 앞두고 대미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 및 특구투자 활성화를 달성해야 하는 한편, 김일성 '유훈'인 통일달성을 위한 남북관계개선 부담을 안고 있는 바, 김정일은 「4자회담」 수용을 통한 대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북·미간 평화협정 원칙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해 북·미 직접협상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한편, 「4자회담」은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막후협상을 지속하려 할 것임. 또한 북한은 각국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자회담」을 결렬시킬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 제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중국 배제시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지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할 가능성은 적음.

다. 경제제재 완화

○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획득을 위해 정부간·비정부간 회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정부관리는 물론 미국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人民外交'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화당우위의 의회외교 대신, 카터를 중심으로 한 對民間外交를 강화할 것임. 특히 친북성향의 미국인 및 민간기업인, 재미교포들에 대

한 招請外交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북 경제제재완화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과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노력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對中政策 展望

가. 「4자회담」

○ 북한은 중국과 「4자회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4자회담」 수용과정에서 중국의 지지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북한은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북·중 지도부간 교환방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4자회담」 수용여부 자체는 물론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남한의 對中 공조노력을 봉쇄하고 북·중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전통적 북·중 혈맹관계 복원에 진력할 것임.

- 북한은 「4자회담」 수용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소관사항임을 강조하고 회담진행시에도 중국에게 북한의 대미·대남전략을 설명, 중국이 자신의 노선을 지지하도록 노력

할 것임. 특히 한국의 공조노력을 무산시키는데 정책적 역점을 둘 것임.

나. 경제지원 획득

○ 북한은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진 중국과의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지원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북·중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李鵬 중국총리의 방한(1994.10.30~11.4), 江澤民 주석 방한(1995.11.13~17) 등으로 인해 소원한 상태였음.

○ 한편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 등 한반도의 현상타파가 중국의 국익에 불리하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필요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바, 북한의 중국 세력권으로부터의 이탈, 북한의 조기붕괴, 외국의 대북제재 등을 원치 않고 있음.[13]

---

13) 중국은 북한핵문제 쟁점화시 대북 제재에 반대, 1993년 UN에서의 대북 제재경고 결의안 채택에 대해 기권(1993.5.12)하였고 최근 북한의 DMZ 무력시위(4.5~7)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 경고결의에 대해서도 반대, 안보리의장 언론성명(4.11)으로 그치게 하였음. 또한 강택민 주석은 북한 노동당창건 50주년(1995.10.10)에 즈음, 북한에

- 중국은 북·대만 관계개선[14]에 대처하고 북·미 관계개선을 통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임.
- 또한 중국은 「미·일 신안보선언」(4.17)을 계기로 21세기 잠재적 적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북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3. 綜合展望

○ 북한은 강대국간 갈등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등거리외교를 선택하여 왔는 바, 향후 북한은 중·미간 갈등구조를 최대한 활용, 국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1960년대 중·소 이념분쟁시 양국의 경쟁적 대북 '포섭'정책을 이용, 체제인정은 물론 경제군사원조를 확보하였음.
- 이와 같은 논지에서 향후 북한은 미국의 대중국 인권시비,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대한 중국의 견제로 발생한 중·미간 갈등구조를 최대한 활용,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14) 북한은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만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식량원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음(3.3).

○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 공조체제를 무너뜨리는 한편, 대중 관계복원을 통해 한·중 밀착관계를 약화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미국 클린턴 정권의 한반도 안정화정책을 간파, '예측불허'의 국가임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을 지속하도록 하는 한편, 대미 관계개선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켜, 체제유지는 물론 연방제통일 조건을 확보하려 할 것임.
- 북한은 한·중수교 이후 체제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미·일 관계개선 등 소위 '남방외교'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적 대중 맹방관계 복원을 위해 정치군사관계 증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통해 한반도내 유일정통성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남한배제전략에 대한 미·중의 지지획득을 위해 대외경제 개방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초청방문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인민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북한은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4자회담」에 대

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4자회담」 수용 전·후 북한의 대미·중 접근을 통한 남한배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향후 북·미관계는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을 통한 한국배제, 북·미 평화협정체결, 경제지원 확보 노력과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으로 인해 보다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북·중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보다는 國家對 國家의 일반적 관계로 전환될 것이나 북한의 정치경제적 필요성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 노력으로 인해 한·중수교 이후보다 더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됨.

Ⅴ. 韓國의 考慮事項

○ 정부는 북한의 대미외교 강화를 통한 남한배제전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바,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평화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이용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기본합의서 복원 등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직접해결 원칙을 촉구해야 할 것임.
- 당사자 해결원칙과 관련, 정부는 당사자원칙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인 바,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입각 북·미수교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북한의 북·중 혈맹관계 복원 노력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문제 중립입장을 지속하도록 대중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는 한·중 군사관계 증진을 통해 공격용 첨단무기의 북한유입을 방

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는 「4자회담」에 대한 중국참여와 참여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대중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행사 한계를 고려, 중국을 과대평가한다거나 지나친 대중 의존은 재고해야 할 것임.

○ 한편 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에 대비, 전세계 유관국들에 대한 외교노력을 통해 남한이 「4자회담」의 주당사국이 되어야 함을 주지시켜야 할 것임.

- 정부는 「4자회담」의 개념·목표·성격 등을 명확히 설정, 국민 및 우방에게 설명하는 한편,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협상대안이라는 입장에서 「4자회담」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정부는 「4자회담」 제의와 관련,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 원칙에서 다자간 해결방식으로 선회한 진정한 이유를 국민과 우방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 정부가 「4자회담」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한다면 「4자회담」시 미국의 'KEDO式' 대북 지원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문제가 남북간은 물론 주변국들

간의 이해불일치로 인해 단시일내에 달성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의연히 대처해야 할 것임.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强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硏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硏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硏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硏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硏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 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硏究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94-07 金正日 리더쉽 硏究
94-08 北韓 民族主義 硏究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强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擧制度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硏究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94-20 「조선전사」 解題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94-24 韓國 民族主義 硏究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硏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硏究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硏究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硏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硏究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硏究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硏究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硏究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의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94-10	韓·러關系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擧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硏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硏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硏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95-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追錄 I)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硏究(上)
94-02 統一文化硏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統一情勢分析 96-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7-9288, FAX :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4월 일
發行日 1996년 4월 일